

전환 함정을 경계하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법

마크 작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인도 사무소장

전환 함정(Transformation Trap)이란 전환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모순이 해결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사회적, 정치적 갈등 속에서는 다음 발전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정치적으로 실행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진보적 전환 프로젝트는 기득권 계급과 신흥 계급 사이의 포용적 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발전적 구상은 공동체주의적 후견주의와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최대의 역량을 제공함으로써 달성하는 혁신과 역량강화를 통해 변화해야 한다.

모두가 최대의 역량을 누리는 좋은 사회(Good Society)라는 비전은 거대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폭넓은 사회연합 구축을 가능케 할 것이다.

2016년 3월

* 이 글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아시아 지역 '내일의 경제(Economy of Tomorrow)'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5년 11월 작성된 영문 원본을 번역한 글이다.

1. 시간과의 싸움

신흥국은 산업화를 달성하고 중간 수준의 소득에 도달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소득국은 성숙산업으로 침투하는 저임금 국가와 선진 혁신국가 사이에 낀 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성장전략을 신속하고 급격하게 변화시켜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한다.¹⁾ 인더미트 길과 호미 카라스는 이를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이라고 부른다. 일부는 이러한 경제적 패턴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실증적 근거와는 별개로 중진국 함정 개념은 산업화 첫 단계의 동력이 상실될 때 정책당국이 부딪히는 과제를 일부 조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르면 경제가 다음 발전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숙련과 가치사슬을 한 단계 격상시켜야 한다. 이때 성장전략의 급격한 변화란 경제모델 전체를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혁신주도 성장으로 변화시킨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협소한 경제적 관점에서 도출되는 정책제안은 기술적, 시장지향적 성격을 띠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발전은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사회적 투쟁의 결과이며, 전환은 승자와 패자 사이의 갈등을 낳는다. 전환사회를 격변시키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갈등 속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협소한 경제적 관점으로는 전환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른 정책제안은 정치적 반발을 촉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키고, 문화적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전환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경제성장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중진국의 과제는 사회적, 정치적 ‘전환 함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사회적, 정치적 발전과 얼마나 깊은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볼 것이다. 전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단지 새로운 경제모델만이 아니라, 가치사슬을 상향이동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정책을 실행할 정치적 안정성도 요구된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은 기득권 계급과 신흥계급 사이의 포용적 타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발전의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진보적 전환 프로젝트의 필수 과제이다. 모두가 최대의 역량을 누리는 좋은 사회라는 비전은 폭넓은 사회연합 구축을 통해 오늘날의 거대한 전환을 달성케 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사라지는 산업화의 기회

발전경제학의 여러 학파는 동아시아의 부상에 대해 경쟁적으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신고전주의 학파는 무역과 해외투자에 대한 경제

발전은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사회적 투쟁의 결과이며, 전환은 승자와 패자 사이의 갈등을 낳는다. 전환사회를 격변시키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갈등 속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협소한 경제적 관점으로는 전환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일본, 대만,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오늘날의 중국이 내부지향적 수입대체모델과 달리 수출을 엄격한 자원 배분과 기술 혁신의 촉매제로서 장려하고 있다. 중상주의 학파는 알렉산더 해밀턴과 프리드리히 리스트의 교과서를 그대로 옮긴 듯한 유치산업 육성에 주목한다.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린 국가들은 오늘날 여러 개발기구들이 권장하는 자유방임주의 정책과는 달리 유치산업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두 학파 모두 수출 제조업의 중심적 역할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수출부문은 국제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언제나 생산성 향상의 압박을 받으며, 경제 전반의 발전동력이 되기도 한다. ‘거대한 전환’의 초기단계에서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은 불완전고용 상태의 농민 수백만 명이 도시의 공장으로 흡수되면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초과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때 경제는 값싼 노동력이 제공하는 가격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초과 노동력이 고갈되면 임금 상승이 시작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은 다음 입지로 이전한다.

값싼 노동비용이라는 비교우위가 사라진 이후 중진국의 과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에 계속해서 의존하거나, 경제적 기초가 없는 산업 육성에 나선다.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내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거나, 천연자원 또는 해외직접투자 기반의 성장처럼 본질적 한계가 있는 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들은 저비용으로 경쟁하는 국가와 생산성이 높은 혁신국가 사이에 낀 처지가 될 수 있다. 중진국의 유일한 길은 자립이나 자급 등의 개념과는 반대로, 글로벌 숙련과 가치사슬을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판매할 신규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기존 문헌에서는 이처럼 새로운 성장모델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 교육부문 투자, 사회기반시설 개선, 첨단기술 제조업과 고수익 서비스업을 통한 수출다변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지난 수십 년간 큰 효과를 거둔 전략은 더 이상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노동생산성이 높으면 적은 노동력으로 같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이 과거보다 줄어든다는 의미다. 대니 로드릭 교수는 세계화된 시장에서 임금이 상승하면 곧바로 제조업의 쇠퇴가 시작되며, 신흥 산업국이 때 이른 탈산업화를 겪는다고 본다. 제조업 신흥국이 경쟁력 있는 부문을 육성한다 해도 서구의 고질적 경기침체로 인한 세계적 생산능력 과잉 때문에 시장이 신흥국 생산제품을 모두 흡수할 여력이 있는지의 문제이라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와 자원을 소모하는 산업화는 지구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간단히 말해 중국과 인도 등의 대국이 현재의 속도로 계속 성장한다면 화석에너지와 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인

동아시아에서 지난 수십 년간 큰 효과를 거둔 전략은 더 이상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노동생산성이 높으면 적은 노동력으로 같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이 과거보다 줄어든다는 의미다.

해 결국 이들은 시장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었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신흥국의 제조업 비용은 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추세는 디지털 자동화로 인한 제조업 비용 하락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비용우위가 사라지면 품질 문제, 법적 불안정, 국내 부패 등의 중요성이 커진다. 이와 함께 소매유통업체의 진열대 교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공급망이 길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난다. 그 결과, 다국적 제조업체들은 과거의 중심 산업국으로 생산기지를 재이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주도형 제조업 성장의 기회가 사라지고, 아직 대안적 발전경로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세계의 기회 구조가 변화하면서 발전을 위한 투쟁은 거대한 ‘시간과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

시간과의 싸움, 승자는 누구인가

최근 중국의 혼란은 수출 및 투자중심 성장모델이 동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값싼 노동집약적 산업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주변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의존도를 내수로 상쇄한다는 결단을 굳힌 것으로 보이며, 임금 상승을 의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혼란은 수출 및 투자중심 성장모델이 동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값싼 노동집약적 산업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주변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의존도를 내수로 상쇄한다는 결단을 굳힌 것으로 보이며, 임금 상승을 의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목표는 동아시아의 초기 산업국처럼 글로벌 숙련과 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한 단계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기술적 운명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중국은 일본, 한국, 대만과 마찬가지로 기술의 최전선으로 나아갈 만큼 탄탄한 국제적 명성을 구축했다. 하지만 성장 둔화로 인해 앞으로 점차 늘어나는 중산층과 도시 노동자들의 희망과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중국은 발전의 기반이 될 정치적 안정을 위해 산출 정당성(input legitimacy) 상실을 투입 정당성(output legitimacy) 강화로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동남아시아가 채택한 수출주도형 산업화 모델은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았다. 동남아시아의 산업화 추진국들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해외투자 중심의 발전경로를 선택했고, 이는 다국적 기업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수입제품의 조립은 기술이전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태국에서는 생산비용 증가, 숙련노동력 부족,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해외투자자들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을 남겨둔 채 떠나고 있다. 사회적, 정치적 질서의 근대화 실패해온 태국 역사를 돌이켜볼 때, 경제 침체와 낙후의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인종 갈등과 종교갈등, 그리고 부패로 몸살을 앓아 온 말레이시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 번 해외직접투자 중심의 성장 활성화를 꿈꾸고 있다. 실령 이러한 꿈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자원개발 중심 정치경제체제의 주요 약점인 혁신의 부재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동남아시아의 주요 과제는 포용적 혁신기반의 발전을 위해 탄탄한 사회연합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도의 운명은 향후 40년간 매달 새로운 일자리 백만 개를 창출할 수 있는나에 달려 있다. 'Make in India'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는 인도 정부는 중국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인도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 거버넌스의 부재, 근대적 사회 기반시설 및 숙련노동력의 부족을 고려할 때 인도가 실제로 '인구학적 배당'을 현금화할 만큼 투자유치에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 일부 비판적 시각에서는 해외투자가 동남아시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서명국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인도가 이미 제조업 중심 성장이라는 '버스를 놓친 것'이 아닌지를 우려하고 있다. 라구람 라잔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어두운 세계경제 전망을 고려할 때 인도가 내수시장 중심의 발전경로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한 단계를 뛰어넘어 무역지향적 서비스 경제로 바로 넘어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제조업의 불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동력이 된다고 보는 낙관론도 있다. 하지만 인도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호황을 놓고 볼 때, 무역에 개방된 고숙련 서비스업은 인구의 절대 다수인 저숙련 노동력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기대만큼의 파급효과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것은 무수히 많은 하위체계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경로로 이끄는 방법이다.

2. 전환의 사회적, 정치적 과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전환국가는 노동집약적 성장에서 지식중심 성장으로 넘어가야 한다. 중진국이 저임금으로 경쟁하는 국가와 선진 혁신국가 사이에 긴 상태를 벗어나려면 글로벌 숙련과 가치사슬을 격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노동력의 숙련도 향상 정책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정치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일도 있다. 창조적 파괴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포용적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환사회 대부분이 선택하는 자원개발 중심 정치경제체제 속에서 현상유지로 이득을 보는 소수는 혁신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세계의 전환갈등

변화에 저항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현상유지 동맹'에는 자신의 지위와 특권을 지키려는 낡은 엘리트뿐만 아니라 급격한 전환이 자신의 세계를 뒤흔들까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이 포함된다. 가족, 일, 남편의 성 역할과 같은 기본적 개념은 불과 한 세대도 지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전환국가는 노동집약적 성장에서 지식중심 성장으로 넘어가야 한다. 중진국이 저임금으로 경쟁하는 국가와 선진 혁신국가 사이에 긴 상태를 벗어나려면 글로벌 숙련과 가치사슬을 격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노동력의 숙련도 향상 정책이 필요하다.

나지 않아 급진적 변화를 겪어왔다. 새로운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자신이 태어난 세계가 사라짐으로 인해 정체성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는 이들도 있다. 사회적 몰락의 두려움은 이러한 사회적 투쟁에 피해망상적, 공격적 성격을 더한다.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극우주의 집단이 소위 '도덕적 몰락'의 희생양을 만들어내고, 상상 속의 역사적 황금기를 복원하기 위해 폭력적 전술을 택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옥중에서 다음과 같이 음울한 지적을 한 바 있다. "위기란 바로 낡은 것이 죽어가고 있지만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공백기에 다양한 병적 증상이 나타난다."

전환위기는 구조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질서와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현실 사이의 격차를 반영한다.

어떤 국가가 중간 수준의 소득에 도달한 후 이러한 상호의존성이 더욱 극명한 문제로 드러난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수십 년간의 산업화는 경제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분절성과 다원성을 강화시켰다.

전환위기는 구조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질서와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현실 사이의 격차를 반영한다. 어떤 국가가 중간 수준의 소득에 도달한 후 이러한 상호의존성이 더욱 극명한 문제로 드러난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수십 년간의 산업화는 경제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사회의 분절성과 다원성을 강화시켰다. 생활양식, 이해관계, 정체성의 다양화는 특히 순응, 단합, 규율을 뿌리로 하는 문화에서 상징질서를 약화시킨다. 세습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수직적 정치체계가 복잡성, 역동성, 갈등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환사회를 통치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구질서는 성장하는 열망,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정당성을 상실하며, 전환의 승자와 패자 사이의 갈등은 정치를 마비시키고 개혁의 실행 동력을 저해한다.

중산층은 이러한 전환갈등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기득권을 가진 중산층이 전통적 엘리트의 편에 설 경우 현상유지는 가능하다. 반면 기득권을 가진 중산층이 신흥계급과 뜻을 모을 경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 그렇다면 중산층은 어떤 동기로 움직이는가?

중산층의 반란, 원인은 무엇인가

지난 15년간 중산층은 전 세계의 여러 전환사회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2000~2001년 필리핀을 시작으로 베네수엘라(2001~2003), 대만(2004, 2006), 우크라이나(2004, 2013), 키르기스스탄(2005), 태국(2006, 2008, 2013~2014), 방글라데시(2006~2007), 케냐(2007~2008), 볼리비아(2008), 조지아(2003, 2007), 레바논(2011), 튀니지(2010~2011), 러시아(2012), 이집트(2011, 2012~2013), 터키(2013), 브라질(2013, 2014), 홍콩(2014), 말레이시아(2015), 에콰도르(2015) 등에서 대중시위가 발생했다. 이러한 시위의 배경과 결과는 다양하지만 모두 전환갈등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질서를 둘러싼 갈등에서 후견주의와 근대적 거버넌스의 논리는 서로 중첩된다. 전환사회에서 선거정치의 역할은 더욱 클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리한 정치인들은

무시당한 다수의 열망과 필요에 영합하는 것이 선거의 ‘승리 공식’임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처럼 인기 있는 지도자들은 일단 권력을 잡은 후 자신을 도운 이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후원자를 보호하며, 친인척에게 특혜를 베풀고, 전리품을 분배하면서 낡은 후견주의 체제의 논리를 답습한다. 이는 유명 정치인 상당수가 ‘선출된 독재자’가 되어 야당을 위협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적 제도를 약화시키는 이유다. 더불어 기득권을 가진 중산층이 위협을 느끼고, 부패와 권력남용에 항의하는 거리시위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시위대의 분노는 기득권을 가진 중산층이 자신에게 제시되는 ‘계약’에 불만이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로 구성된 정부는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부와 기회를 재분배한다. 이러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그 대상이 부유층이든 빈곤층이든 결국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이 가해지면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진다. 중산층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한, 이들은 사회의 다른 계층과 연대하자는 요구를 거부할 것이다. 한편 기회의 평등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다수의 시민은 사회의 구질서에 맞서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장기화된 사회적 갈등은 다시 중산층의 두려움을 촉발하고, 이는 결국 ‘자격 없는 대중’의 요구에 반대하는 시위로 이어진다. 이처럼 ‘누구와의 연대인가’라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누가 정치체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되며, 누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하위주체로 간주되는지 알려준다. 여러 사회에서 연대는 동일한 집단이나 계급, 신분,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환갈등의 핵심에는 이처럼 과거의 농민들을 정치체에 포용하는 문제가 자리한다. 간단히 말해 전환위기는 낡은 사회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새로운 사회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둘째, 중산층의 시위에서 부패, 족벌주의, 대중영합주의가 중심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후견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보여준다. 이러한 후견주의 관행은 전환기에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환사회에서 막스 베버가 말한 ‘근대적 국가조직’은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근대적 제도가 부재하거나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한, 여전히 ‘힘 있는 사람’과의 전화 한 통이 일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엘리트가 후견주의 체제에서 이득을 누리는 반면, 빈곤층은 후견주의에 의지하여 물리적 생존을 도모한다. 중산층에게 후견주의는 다른 사람이 활용하면 나쁘고 자신에게 유용하면 좋고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중산층은 왜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낡은 거버넌스 방식에 항의하는 것인가? 이러한 태도 변화는 자본주의적 계약 문화에 따른 심층적 전환에 의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경제가 동등한 개인 간의 계약관계로 이루어진다면, ‘왜 누구는 공적 문제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시위대의 분노는 기득권을 가진 중산층이 자신에게 제시되는 ‘계약’에 불만이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로 구성된 정부는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부와 기회를 재분배한다. 이러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그 대상이 부유층이든 빈곤층이든 결국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이 가해지면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워진다.

발언권이 거의 혹은 전혀 없는가'라는 다수의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책임성, 투명성, 참여, 반응성에 대한 요구는 사실 정치체의 근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후견주의 관행에 대한 시각도 이에 따라 변화한다. 지지자에 대한 보상은 이제 '대중영합주의'라는 공격을 받고, 친인척 특혜는 족벌주의로 비난 받으며, 후원자 보호는 정실주의로 비판 받고, 전리품의 분배는 부패라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부패는 책임성 없는 엘리트에 의한 권력남용을 통칭하는 새로운 기준이다. 간단히 말해 중산층은 '자격 없는 빈곤층의 표를 대중영합적 정책으로 매수하기 위해 자신의 돈을 빼앗는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당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중산층의 시위는 본질적으로 근대화의 주요 방해물인 후견주의 체제를 겨냥한다.

이렇게 보면 '좋은 거버넌스' 담론이 중산층에서 인기 있는 이유가 설명된다. 고전적 근대화 이론으로 볼 때 중산층은 민주화의 주도세력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홍콩과 쿠알라룸푸르 등의 시위대가 포용성과 참여의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방콕과 카이로의 시위대가 '교육받지 못한' 대중의 참정권 박탈과 선거민주주의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중산층의 분노는 객관적인 계급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전환갈등에 대한 담론적 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자원개발 중심의 정치경제체제가 인구의 다수를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환갈등을 단순히 부유층과 빈곤층의 '계급투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산층의 분노는 객관적인 계급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전환갈등에 대한 담론적 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자원개발 중심의 정치경제체제가 인구의 다수를 체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환갈등을 단순히 부유층과 빈곤층의 '계급투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현상유지 동맹'과 '변화 동맹'은 모든 사회 계층과 부문에 걸쳐 존재한다. 현상유지를 원하는 세력과 정치적, 사회적 질서의 근대화를 추구하는 세력의 균형은 여러 사회집단을 자신의 투쟁에 참여시키는 각 세력의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 말해 전환갈등의 결과는 단순히 구조적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갈등의 담론적 구성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전환갈등이 사회경제적 용어의 틀로 구성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며, 오히려 다른 인종, 종교, 성별, 민족간의 정체성 갈등으로 규정된다. 어떤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의 위협을 받는다고 인식되면, 내부의 사회경제적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의 외부적 위협에 맞서는 단결력이 억제될 수 있다. 이는 문화적 공동체주의와 정체성의 정치가 사회적, 경제적 현상유지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상적 수단이라는 뜻이다. 역사적 결정론의 기대와는 달리 전통적 엘리트는 갈등의 틀을 문화적 본질주의의 용어로 구성함으로써 중산층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본주의적 세계화와 사회적 해방의 공세에 맞서 현상유지에 성공할 수 있다.

전환사회에서 정치질서를 경제성장과 다원적 사회의 필요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걸림돌로 인해 힘겨운 과제가 되어가고 있다.

3. 전환 함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

전환 함정이란 무엇인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신흥국은 노동집약적 성장에서 혁신주도 성장으로 전환함으로써 세계적 역풍에 맞서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과제의 상호연결성은 이를 매우 힘겹게 만들고 있다. 글로벌 숙련과 가치사슬의 상향이동을 위해 설계된 정책은 사회적, 정치적 갈등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실행 불가능할 수도 있다.

혁신주도 성장을 시작하려면 고숙련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적 자원에 투자하려면 세수가 크게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중산층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한, 이들은 증세를 거부할 것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연대성을 당연한 권리로 제공하는 사회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력의 숙련도 및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은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빈곤층을 위한 재분배정책은 중산층을 등지게 만들 가능성이 더욱 크다. 하지만 인적 자본을 향상시키지 못할 경우 경제는 낮은 가격 또는 높은 생산성을 갖춘 경쟁국에 매우 취약해진다. 불평등의 심화, 경제적 동력의 약화, 불만의 확산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침체와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

다양성과 이동성이 높은 사회에서 하향식 정책추진은 정책 수혜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고, 제도적, 사회적 기획으로 발전을 촉진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혁신은 강제될 수 없으며, 더욱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꽃필 수 있다. 성장을 둔화로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가 힘들어지면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은 더욱 어려워진다.

간단히 말해서 전환 함정은 어떤 국가가 중간 수준의 소득에 도달하면 경제가 체계적으로 둔화된다는 경제법칙 같은 것이 아니다. 전환 함정이란 전환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의 필요성

전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은 경제문제 이상의 중대한 정치적 과제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화적, 사회적 두려움은 파괴적 혁신을 가로막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과거 농민이었던 수백만 인구와의 연대를 포함하는 사회계약이 없다면 혁신주도 성장을 위한 고숙련 노동력의 육성은 힘들어진다. 가치사슬의 상향이동은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재분배는 물론 창조적 파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달성한다는 의미다. 이는 곧 지속가능한 고성장을 위해 안정된 사회적,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뜻이다.

경제와 국가의 근대화에 필요한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혁신주도 성장을 시작하려면 고숙련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적 자원에 투자하려면 세수가 크게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중산층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한, 이들은 증세를 거부할 것이다.

역사를 볼 때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적 ‘뉴딜’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이루어졌다. 사회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번영을 약속한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삶에 온전히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누리는 대신 다수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받아들였다.

서는 모든 계급의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기득권 계급을 안심시키면서도 수백만 인구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진 정치체의 시민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포용성 있는 사회적 타협뿐이다.

역사를 볼 때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적 ‘뉴딜’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이루어졌다. 사회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번영을 약속한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삶에 온전히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누리는 대신 다수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받아들였다. 중산층은 사회적 평화, 법치주의에 의한 보호, 좋은 거버넌스, 양질의 공공재를 누리는 대신 재분배 정책의 재원을 충당했다. 마지막으로 엘리트층은 사회적 평화와 정치적 안정을 누리는 대신 모두에게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정의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와 같은 사회민주주의적 타협은 한 세기에 걸친 갈등 이후 사회적 평화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고, 전후 번영의 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

물론 오늘날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역사적 뉴딜이 사회적 타협의 청사진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뉴딜은 사회적 타협이 대립적 이해관계의 ‘최소 공통분모’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평화와 정치적 안정을 달성할 발전 모델이다. 높은 GDP 성장률은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은 성장과 형평성을, 포용성과 혁신을, 보존과 급격한 변화를 통합해야 한다. 아시아 신흥국의 학자 2백 명 이상이 참여하는 ‘내일의 경제(Economy of Tomorrow)’ 프로젝트는 사회정의와 회복력을 겸비한 역동적 녹색발전 모델을 제안해 왔다. 내일의 경제 모델은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 접근법(capabilities approach)*을 기반으로 시민 모두의 창조적, 기업가적, 인지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혁신 주도 성장을 달성하고자 한다.

전환 프로젝트,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특히 매우 다원적이고 분권적인 정치체에 서 여러 사회집단은 분배를 둘러싼 갈등을 겪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분절된 정치영역에서 발전정책은 기술관료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정책을 사회에 강요하기보다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의 계산법을 바꿔야 한다.

* 아마르티아 센과 마사 누스바움은 개인이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최소 10가지의 역량 범주를 제시한다. 신체의 건강, 신체의 완전성, 감각, 상상력과 사고력, 감정, 실천이성, 관계, 인간 외의 종, 놀이, 자신의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이에 해당한다.

무수한 하위체계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식할 때, 하나의 새로운 공통 방향을 향해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고성장 우선’ 패러다임은 점차 커지는 열망, 인내심의 부족, 불안감으로 인해 정치담론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정치적 의제는 ‘성장의 방해물’이라는 틀로 인식되면서 쉽게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 노동권, 토지권, 환경보호, 사회적 평등, 기후변화 등의 의제는 ‘지금은 감당할 여력이 없는 사치’로 취급된다. ‘고성장 우선’ 패러다임 속에서 진보적 정책은 실행은 물론 알리는 것조차 어렵다.

전환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과제를 고려할 때 ‘고성장 우선’ 전략은 전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발전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 따라서 전환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포용성 있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패러다임에서는 모두가 발전을 위한 사회적 타협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지위와 특권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이들도, 자신의 정체성에 위협을 느껴 저항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은 현상유지를 원하는 세력과 변화를 원하는 세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결과가 될 것이다.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변화의 주체들이 변화를 위한 폭넓은 사회연합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변화를 위한 폭넓은 사회연합은 개혁 성향의 엘리트층을 포함해 모든 부문과 사회적 계층에서 변화의 주체를 결집시킨다. 이러한 연합이 실제로 민주화 과정에 성공한 사례로는 필리핀(피플파워 혁명, 1986), 한국(6월 민주항쟁, 1987), 남아프리카공화국(아파르트헤이트 철폐운동, 1994), 인도네시아(레포르마시 운동, 1998) 등이 있다. 인도와 같은 다원주의적 연방제 민주국가의 경우 폭넓은 사회연합 구축은 발전 경로의 중대한 변화는 물론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개혁을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계급, 정체성,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폭넓은 사회연합을 구축하기는 어렵다. 현재의 여러 사회집단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우선순위가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최소 공통분모는 변화를 위한 폭넓은 사회연합의 강령 역할을 하기에 너무 협소하다. 따라서 고립된 진보적 투쟁을 변화를 위한 폭넓은 사회적 투쟁으로 확장하기는 쉽지 않다.

공통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연합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면 ‘담론 동맹’에서 출발해 변화를 위한 폭넓은 사회연합을 구축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것이다. 현존하는 다양한 이해관계 사이에서 마치 거래하듯이 타협을 중재하기보다는 이러한 이해관계들이 수렴하는 대안

공통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연합을 구축하기가 어렵다면 ‘담론 동맹’에서 출발해 변화를 위한 폭넓은 사회연합을 구축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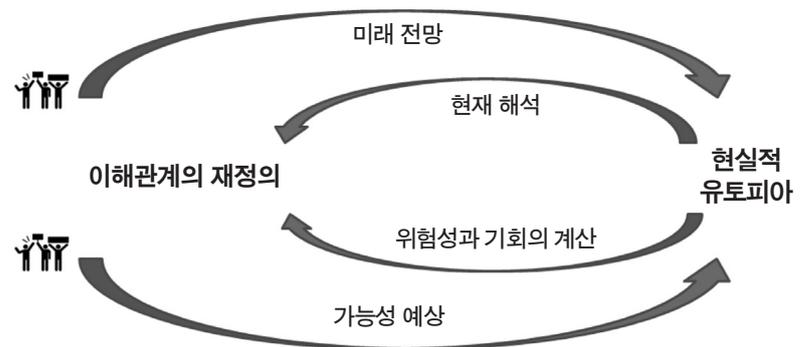
‘역사의 종언’ 이후 진보세력은 이러한 유토피아적 방법을 잊은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변화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대안은 없다’는 명제가 만든 빈자리를 오늘보다 나은 미래의 비전으로 채워야만 한다.

전환 프로젝트가 단지 정책을 모아놓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 정치의 제약을 넘어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현실적 유토피아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적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것이 더욱 생산적이다.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현실적 유토피아를 제시해야 한다. 미래를 새롭게 상상하면 역으로 오늘날의 상황에 대한 해석이 변화한다. 미래의 사태 전개에 대한 전망이 변하면 각 주체는 자신의 선택에 따르는 위험성과 기회를 새로 계산하고, 이해관계를 재정하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예상되는 미래에서 이해관계가 수렴하는 지점을 지향하면, 현재의 위험성과 기회에 대한 계산법을 바꿀 수 있다. 즉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이해관계의 간극이 극복되는 것이다.

‘역사의 종언’ 이후 진보세력은 이러한 유토피아적 방법을 잊은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변화를 위해 투쟁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대안은 없다’는 명제가 만든 빈자리를 오늘보다 나은 미래의 비전으로 채워야만 한다. 전환 프로젝트가 단지 정책을 모아놓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 정치의 제약을 넘어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현실적 유토피아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상상력의 지평을 확장하고(‘담대한 희망’), 지지층에게 힘을 불어넣고(‘우리는 할 수 있어’), 폭넓은 사회연합 구축의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무지개연합’) 현실적 유토피아는 자의적인 것이 아닌, 전략적으로 설계된 전환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잠재적 지지층을 동참시키기 위해 현실적 유토피아의 핵심 약속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라 부를 만큼 신뢰성을 주는 한편, 여러 주체가 현재의 차이를 넘는 시야를 가질 수 있을 만큼 과감한 전환을 지향해야 한다. 유토피아적 비전(‘우리의 꿈’)이 폭넓은 담론 동맹의 강령 역할을 하려면 담론 영역의 한가운데에 자리해야 한다. 전환적 정치 프로젝트는 공통의 가치와 집단적 경험을 틀로 삼아 좋은 정치, 좋은 경제, 도덕적 올바름을 통합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담론 동맹이 핵심 집단 사이에서 변화를 위한 폭넓은 사회연합의 기반을 구축하려면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담론 동맹을 구축하는 첫 단계는 기존의 담론 공동체들을 분석해 각자의 기대와 약속 사이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다. 둘째, 모든 담론 공동체,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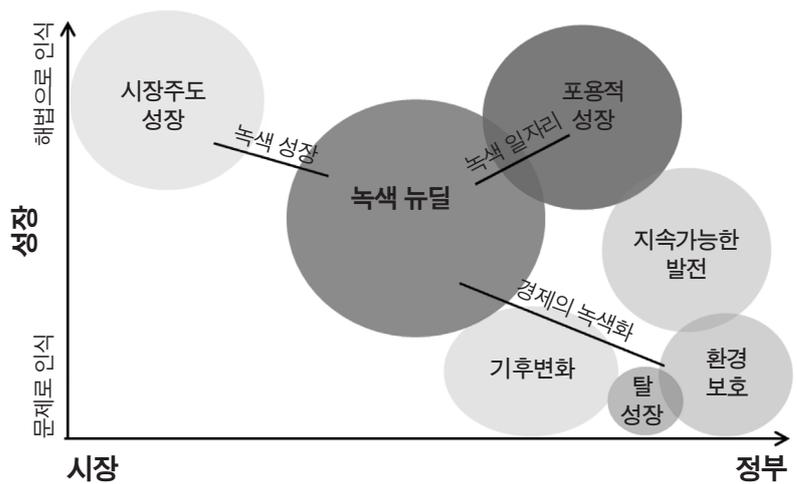
어도 핵심적 담론 공동체의 약속들이 수렴하는 유토피아적 토대를 예상해야 한다. 유토피아적 토대란 바로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이다. 셋째, 현재의 상황을 전환시킬 잠재력이 폭넓게 인정되고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구조적 동력을 포착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구조적 동력을 중심으로 사회가 현실적 유토피아로 나아갈 방법을 신뢰성 있게 설명해 줄 구상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변화적 구상은 다양한 담론 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의 틀로 구성되어야 서로의 간극을 메울 수 있다. 다섯째, 핵심 집단이 새로 정의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전환적 정치 강령이 구성되어야 한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강령이 현재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최소 공통분모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에서 재정의된 이해관계가 어떻게 수렴하는지 서술함으로써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섯째, 핵심 집단들이 각기 새롭게 정의한 이해관계를 추구할 수 있도록 현실적 전환 프로젝트가 설계되어야 한다. 물론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 속에서 재정의된 이해관계는 서로 수렴하기 때문에 각 집단의 행동은 결국 공통분모를 갖게 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위험성과 기회에 대한 계산법도 변경되기 때문에 각 주체는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는 다른 주체의 기회 구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이해관계가 재정의되면 평소 서로 대립했던 주체들 사이에서 협력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담론 동맹은 이해관계에 대한 새로운 계산법과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협력의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를 위한 폭넓은 사회연합을 탄생시킬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은 지정학적 전환 프로젝트의 좋은 예시다. 고대 실크로드를 복원한다는 ‘중국의 꿈’은 유라시아의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을 확장한다. 유라시아의 경제·정치 지도를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은 단순히 도로, 철도, 항구, 교량 차원을 넘어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변화시킨다. 동시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제공하는 기금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은 이러한 약속에 신뢰를 더한다. 간단히 말해 전환 프로젝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주체들의 계산법을 변화시켜야 한다.

전환 프로젝트의 다른 사례로는 ‘녹색 뉴딜’이 있다. 수십 년간 ‘성장인가 환경인가’라는 인위적 이분법은 녹색 발전경로를 향한 전환을 처음부터 가로막았다. 녹색 뉴딜은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초월하고 담론 동맹의 기반을 구축했다. ‘녹색성장’이라는 구상은 성장과 자원 소모의 분리를 약속하면서 환경을 중시하는 ‘기후변화’ 담론 공동체와 친기업 성향의 ‘시장주도 성장’ 담론 공동체 사이의 간극을 메웠다. ‘녹색 일자리’라는 약속은 ‘녹색’ 담론 공동체와 ‘포용적 성장’ 담론 공동체를 이어주었다. 탈탄소 담론 동맹은 교황과 같은 종교 지도자와 빌 게이츠 같은 억만장자를, 에너지 안보를 걱정하는 전략지정자와 환경운동가를 결집시켜 주었다. 탈탄소 담론 동맹은 다가오는 화

전환 프로젝트의 다른 사례로는 ‘녹색 뉴딜’이 있다. 수십 년간 ‘성장인가 환경인가’라는 인위적 이분법은 녹색 발전경로를 향한 전환을 처음부터 가로막았다. 녹색 뉴딜은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초월하고 담론 동맹의 기반을 구축했다.

석연료 시대의 종언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킴으로써 ‘탄소경제 탈피’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으로 설정했다. 정치 주체와 시장 주체들은 위험성과 기회에 대한 새로운 계산을 바탕으로 재정의된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유럽의 각국 정부는 화석연료 산업에 매년 제공되는 조 단위 보조금에 의문을 제기하며 탄소경제 탈피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탄소배출량 감축목표가 제시되자 지구상에 남아 있는 화석연료가 모두 소진된다는 전제는 불확실해졌으며, 영란은행과 독일 정부는 (안전자산에만 투자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에게 ‘탄소 거품’을 고려해 화석연료 관련 주식을 재평가하라고 경고했다. 새로운 이해관계 계산법은 독일과 이탈리아의 전력회사들이 전통적 자원에 의존하는 발전소를 전부 매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탈탄소 패러다임이 부상하면서 과거에는 부정적이었던 이들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변화를 위한 국제적 연합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초월하기 위해 전환 프로젝트가 제시해야 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비전은 무엇인가? 모든 계급이 연대할 기반을 마련하려면 발전적 구상에서 공동체주의적 후견주의와 정체성의 정치가 아닌, 사회적 역량강화와 경제발전이 미래 구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모두가 최대의 역량을 누리는 좋은 사회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초월하기 위해 전환 프로젝트가 제시해야 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비전은 무엇인가? 모든 계급이 연대할 기반을 마련하려면 발전적 구상에서 공동체주의적 후견주의와 정체성의 정치가 아닌, 사회적 역량강화와 경제발전이 미래 구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두가 최대의 역량을 누리는 좋은 사회’는 강력한 규범적 비전을 제시한다. 동시에 역량적 접근법은 폭넓은 발전담론 동맹의 강령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적 구상은 전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음 발전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약속을 제시한다. 혁신주도 성장의

잠재력을 현실화한다는 약속은 ‘고성장 우선’ 담론 공동체에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역량강화에 대한 강조는 ‘형평성’, ‘포용성’, ‘정의’ 담론 공동체와 연결될 수도 있다. ‘자유로서의 발전’은 심지어 ‘해방’과 ‘자유’ 담론 공동체와도 만난다. ‘성장’, ‘정의’, ‘해방’, ‘안정’ 담론 공동체를 결집시키면 근대화를 위한 담론 동맹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환담론 동맹은 발전의 패러다임을 ‘GDP 고성장’에서 ‘지속가능한 고성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진보세력은 지속가능한 고성장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 사회민주주의적 타협으로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 발전담론은 모두에게 최대한의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 글로벌 숙련과 가치사슬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해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문별 구상은 사회발전을 지속가능한 고성장의 선결조건이라는 틀로 제시함으로써 ‘경제성장인가 사회발전인가’라는 허구적 이분법을 초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 시티가 연상되는 지식경제사회에서 창조적 혁신가들을 유치하려면, 물리적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화와 문화적 개방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탈탄소 시대에 지속가능한 고성장을 달성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자원 소모의 분리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역량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사회적 타협을 구축하면, 발전담론 동맹 속에서 변화를 위한 폭넓은 사회연합이 탄생할 수 있다. 근대화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진 모든 집단은 ‘지속가능한 고성장’ 패러다임 속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협력 동맹에 참여할 주요 구성원은 변화를 열망하는 계급은 물론 정책을 결정하는 선출직 공직자, 민간투자자, 기업가, 진보적 중산층 등이다. 역량적 접근법은 분배정의를 추구하는 세력과 ‘승인적 정의’를 원하는 세력의 투쟁을 결합함으로써 다양한 진보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다. 또한 모두가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혁신이라는 민간부문의 목표가 정치안정이라는 국가의 관심사와 결합된다. 이러한 접근법은 신중계급의 열망과 필요에 부응하는 한편, 중산층에게는 세금의 대가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능력주의라는 중산층의 이상과 기회의 평등이라는 인구 다수의 열망을 결합함으로써 엘리트층, 중산층, 인구 다수 사이에 사회적 타협의 가능성을 연다. 이처럼 역량에 관한 사회적 타협을 기반으로 한다면, 근대화와 발전을 위한 폭넓은 사회연합 구축은 가능할 것이다.

‘모두가 최대의 역량을 누리는 좋은 사회’는 오늘날 거대한 전환을 위한 진보적 프로젝트에 강력한 이념적 틀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최대한의 역량을 누린다’는 말을 현실화할 구체적인 전환 프로젝트를 부문별로 정의할 시점이다.

‘모두가 최대의 역량을 누리는 좋은 사회’는 오늘날 거대한 전환을 위한 진보적 프로젝트에 강력한 이념적 틀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최대한의 역량을 누린다’는 말을 현실화할 구체적인 전환 프로젝트를 부문별로 정의할 시점이다.

|후주|

1) 지면 관계상 영문 원본 'Mind the Transformation Trap. Laying the Political Found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의 14~19쪽 참조 요망.

(링크주소: <http://library.fes.de/pdf-files/bueros/indien/12073.pdf>)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집인 스벤 슈베어젠스키, 김태현

편집위원 김영희 신진욱 안두순 안석교 안인경 정범구 (가나다 순)

주소 03131 서울시 종로구 울곡로 88 (운니동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info@fes-korea.org

<http://www.fes-korea.org>

FES Information Series는 유럽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들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korea.org>)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16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Commercial use of all media published by the Friedrich-Ebert-Stiftung (FES) is not permit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FES.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이 발간한 모든 출판물은 FES의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